

기관협업으로 불법·불량·유해 수입물품 사전차단

정부3.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다,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 개최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집근처 상점에서 LED 조명기구와 함께 자녀에게 선물로 줄 장난감과 의류를 구입했다. 구입물품들이 모두 수입산 제품임을 확인하고, 행여 조명기구에서 불이 나지는 않을까? 완구·의류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건 아닌지 짝짝한 생각이 들었다. 불법·불량 수입제품들이 난무한 요즘, 과연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관세청이 관계부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수입 완구 및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미인증, 허위표시)·불량(부품 불법교체)·유해(유해 성분기준치 초과)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정부3.0 우수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정부3.0 성과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정부3.0 성과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인천공항세관에 소재한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협회)·환경부(한국화학물질안전협회) 직원이 협업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반입되는 시점인 통관단계에서부터 수입 업체의 인증서 위조, 중요부품 누락, 중금속 허용량 초과 등 유해·불법·불량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는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18만점(컨테이너 30대분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과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검사체계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부3.0 현장방문은 ‘정부3.0 현장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3.0 현장포럼’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부3.0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 중심의 정부3.0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3.0에 대한 열정이 높은 현장의 담당과장부터 주무관이 함께 매달 정부3.0 현장을 찾아가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정부3.0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3.0의 성과가 국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02-2100-3420),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042-481-7660)